

한국 정보화의 미래개념사: (국제)정치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김 상 배 | 서울대학교

이 글은 한국에서 나타났던 정보화 개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정보화의 과정에 반영된 (국제)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시론(試論)을 펼쳤다. 이렇게 정보화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은 정보화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정보화를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언어적 실천을 이해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이 독일의 사학자인 라인하르트 코젤레크(Reinhard Koselleck)가 주도한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 이른바 '미래개념사'를 새로이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이 글이 파악한 한국의 정보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정보화의 개념적 '표준'을 세우기 위한 경합을 벌이고, 이러한 경합과정에서 이른바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모색한 언어적 실천의 역사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외래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네트워크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양자를 복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내에서 개념을 번역(翻譯)하고 반역(反逆 또는 反譯)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발전국가 담론과 민주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사회 담론의 경합이었고, 대외적으로 개념을 역(逆)전파 및 중개하는 차원에서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이룩한 정보화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외교적 노력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보화, 한국, 개념사, 미래개념사, 국제정치학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3683).

I. 머리말

한국은 정보화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흔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성공,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IT 인프라 강국의 이미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과 인프라의 성공을 이끌어낸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대내외적으로는 정보화 강국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다. 그러나 정보화를 평가하는 잣대를 달리하면, 한국이 받아놓은 성적표의 점수는 달라진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쾌속 행진을 벌여온 한국 정보화의 강점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강조하는, 이른바 스마트 국면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른바 발전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오히려 민간 기업들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판받기도 한다. 요컨대, 한국이 자랑해온 정보화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무엇을 정보화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내용이 좌우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 정보화는 그 외연과 내포가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넓게 보면 정보화라는 개념의 외연은 기술, 산업, 미디어,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체성 등과 같은 어느 한 부분의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정보문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19세기 중후반 조선의 기술 수용이 단순히 서구의 문물과 기술 및 지식의 수용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서구에 기원을 두는 근대 문명 전반을 수용하는 문명과 연결되었던 것에 비견할 만하다(김상배 2012). 게다가 그 내포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1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현실에서 도출된 정보화 개념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를 논할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정보화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mind, 念)의 뿌리를 보여주는(觀) 관념(觀念, idea)이나 사상을 논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정보화는 어느 행위자나 집단이 내거는 슬로건이거나, 다수의 집단적 사고 속에 산재하고 있어 서로 경합하는 다의적인 개념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지식을 구성하는 제도화된 언술체계인 담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정보화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정보화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의 실천방향을 잡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화는 변화의 와중에서 아직도 창발하고 있는 현실을 개념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보화

는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을 원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화의 의미는 달라지며,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사회적 태도와 정치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정보화의 개념은 ‘텍스트(text)’가 확정된 ‘개념의 과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맥락(context)’에 따라서 ‘상이한 개념의 텍스트가 경합(intertext)’하는 ‘개념의 미래’까지도 다룬다. 다시 말해 정보화 개념은 역사적 맥락에서 그 개념적 범위에 대한 현재적 관심을 투영함으로써 미래의 현실을 구성해가는 언어적 실천의 문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의 개념은 독일의 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레크(Reinhart Koselleck)로 대변되는 개념사(Begriffsgeschichte)의 연구대상이다(Koselleck 1985: 1998: 2002). 1960년대를 전후해서 독일에서 출현한 개념사 연구는 개념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한다. 그러나 개념사 연구가 단순히 개념의 뜻풀이나 그 개념의 역사적 지속이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론적 차원과 그 개념이 잉태된 사회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 개념사 연구는 구미에서 진행되어 온 어원사나 지성사 또는 사상사 등과는 대비된다(하영선 2004, 6). 실제로 “코젤레크는 정치사회적 담론에서 사용된 기본개념들의 변화와 정치사회구조의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탐구하는 ‘사회사적 개념사’를 역사학의 새로운 전문분과로 확립했다”고 평가된다(나인호 2011, 17). 따라서 어느 개념이 진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사의 내용은 넓게는 보편적 문명사가 될 수도 있고, 좁게는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문화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사 연구를 오늘날 한국이라는 시공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래개념사’의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인식이다. 여기서 미래개념사라 함은 과거의 경험지평과 미래의 기대지평 속에서 창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언어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념사의 일면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 말하는 미래개념사는 단순히 미래의 시나리오를 역사적 맥락에서 제시하는 ‘미래사’와는 구별된다. 미래개념사에 대한 관심은, 미래의 변환을 잡아내는 개념사 연구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개념에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특히 이 글의 주제인 정보화 개념을 다루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정보화의 미래를 개념적으로 잡아내는 문제는 단순히 미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개념을 통해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미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변하는 오늘날 정보화의 현실을 둘러보면 미래 개념을 누구보다 먼저 개발해서 전파하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미래개념사 시각을 원용해서 한국이 추구한(또는 추구할) 정보화의 (국제)정치학적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국제)정치학적 차원이라 함은 정보화라는 개념의 생성과 전파 및 수용이 단순히 중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내외 행위자들의 이익과 권력이 개입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근대화화 산업화라는 역사적 현상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사회변동과 권력변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19세기 근대 기술 개념의 전파와 수용의 역사가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부국강병의 권력게임을 반영했다면, 오늘날 정보화 개념의 전파와 수용 현상은 21세기의 새로운 권력게임을 둘러싼 새로운 행위자들의 각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는 통시적 차원에서 본 근대화나 산업화 등과 같은 기존 개념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보화 개념이 새로이 생성되어 전파되고 수용되는 세계정치의 공시적 차원이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차원에서 정보화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한국에서 나타난(또는 나타날) 정보화 개념의 언어적 실천을 여러 개념(또는 담론)이 경합하는 와중에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인 세 가지 차원의 ‘개념표준경쟁’의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미국의 정보화 담론과 일본의 정보화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수용 및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중국의 정보화 담론도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개념의 번역(翻譯)과 반역(反逆 또는 反譯)¹⁾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위로부터의 정보화 담론과 아래로부터의 정보화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기술효율성을 앞세우는 정부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번역’과 ‘반역’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에 기원을 두는 개념어이다(홍성욱 2010). ANT에서 번역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지나감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념사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수용되는 개념이 단순히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사정에 맞추어 변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에서 반역(反逆, treason)은 기성 권력의 번역에 대한 저항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념사의 맥락에서 보면 ‘반역(反譯, reverse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와 기업의 담론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시민참여 담론이 양대 축을 이루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개념의 역(逆)전파와 증개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한국이 이룩한 정보화의 성과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역전파하는 기대와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견국 외교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증개하는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화 개념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는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본 언어적 실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여태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정보화의 개념사는 고사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정보화의 사건사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보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 정리마저도 미흡했다. 정부출연기관에서 출간되는 백서나 핸드북 등이 있지만 주로 국가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 또는 IT 산업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사회문화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정보화의 면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홀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회과학연구들도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 하물며 한국의 정보화를 개념사 또는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다룬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 그럼에도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이 추구해온 정보화의 상(像)은 무엇이며 앞으로 모색할 정보화의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화의 미래개념사 연구를 위한 논의를 시론(試論)의 차원에서나마 펼쳐 보고자 한다.²⁾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이 글의 논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2) 한국 정보화의 사건사를 개괄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된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화진흥원 1993-2014)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정보통신정책핸드북』 시리즈, 그 중에서도 제3권(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 2006)을 일차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한국의 정보화 개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IT인프라 정책에 대한 평가(Lee et al. 2003; Shin 2007; Kushida and Oh 2007), 정보화 정책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Kim 2006; 김평호 2006),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김상배 2002: 2010; 유석진 외 2006; 황중성 2007), 국가정보화의 사례로서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회고와 평가(송희준 2009; 송희준·조택 2007; 정충식 2009; 이혜원·명승환 2013), 한국의 정보화 정책 및 IT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홍성태 2005; 김인성 2011), 정보화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조명(유선영 외 2007; 이광석 2012)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다.

필요한 기초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개념과 개념사 및 미래개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미래개념사의 시각을 적용해서 보는 정보화의 개념적 특징과 층위에 대한 논의를 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 글에서 활용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제4장은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한국에서 정보화 개념의 전파, 수용, 번역, 반역, 역전파, 중개 과정을 시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종합·요약하고 정보화의 미래개념사 연구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짚어 보았다.

II. 미래개념사 연구방법의 모색

코젤레크로 대변되는 독일의 개념사 연구는 개념이 형성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의 분석과 그 개념의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Koselleck 1985: 1998: 2002; 박근갑 외 2015).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개념사와 사회사를 결합함으로써 살아있는 전체 역사의 모습에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하영선 2004, 6)을 펼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미론(historical semantics)의 관점에서 언어와 실제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개념사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표현했는가, 또한 이 주관적 인식과 내면적 경험의 세계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나인호 2011, 13)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념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개념사의 연구방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념(concept)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관념(idea)이나 담론(discourse)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나인호에 의하면, 관념이 “여러 사실들로부터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불순물 및 역사적 영향을 제거한 뒤 남는 순결한 단위관념”(나인호 2011, 36)을 의미한다면, 개념이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내뿜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언어적 구성물”이다(나인호 2011, 38). 따라서 역사상 존재했던 개념들은 그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경험의 맥락들이 [어느] 단어 속에 한꺼번에 유입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단어는 개념이 된다”

(나인호 2011, 53). 이러한 개념은 “특정 시대의 특정 지식을 만들어내는 제도화된 말하기 방식 및 생각의 방식”(나인호 2011, 41)을 뜻하는 담론과도 다르다. 개념은 특정 담론의 구성요소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특정 담론의 의미론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관념, 그리고 담론은 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 살펴보는 정보화 개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러한 개념-관념-담론 복합체의 탐구는 서구 지성사의 오랜 연구주제였다.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uller)는 이러한 개념-관념-담론의 논의를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나타난 지성사의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Muller 2011). 첫째는 라인하르트 코젤레크 중심의 독일 개념사 학파로서 ‘사회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읽어내려는 시도이다(Koselleck 1985: 1998: 2002). 둘째는 퀴틴 스킨너(Quentin Skinner)로 대변되는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로서 ‘언어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려는 시도이다(Skinner 1969; Bell 2001). 마지막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80)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담론 분석으로서 ‘텍스트의 관계적(inter-textual) 맥락’에서 권력/지식(power/knowledge)의 사회적 실천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들 학파는 모두 정치사상 텍스트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찾는 텍스트주의자들의 탈(脫)맥락화(de-contextualized)된 작업을 비판하고, 텍스트 그 자체보다는 각기 ‘다양한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독일 개념사 연구는 여타 두 학파와 각각의 친화성이 있다. 특히 독일 개념사의 전통과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파의 사상사는 상대적으로 친화성이 크다. 예를 들어, 라이너 켈러(Reiner Keller)는 독일에서 피터 버거(Peter L. Berger)와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을 중심으로 발전한 SKAD(The Sociology of Knowledge Approach to Discourse)와 케임브리지 학파의 친화성을 지적하고 있다(Keller 2011; Berger and Luckmann 196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정한 행위자의 의도와 이익, 정치적 의도가 특정한 개념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 개념사와 푸코의 담론분석도 친화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담론은 개념을 탄생시키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담론이 지향하는 사회적 실천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개념사가 담론의 맥락 속에서 개념을 분석하고 담론사가 개념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한다면, 양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나인호 2011, 4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념은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되는 정치적 의도의 반영물이며 미래를 모색하는 담론적

실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적용해서 볼 때, 정보화라는 개념은 ‘개념’인 동시에 ‘사상(관념)’이고 ‘담론’이며, 정보화의 개념사는 코젤레크류의 개념사의 대상인 동시에 스키너류의 사상사의 대상이고 푸코류의 담론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개념사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개념사와 사회사의 상호작용이고, 케임브리지 학파가 말하듯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언어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사상이며, 푸코가 말하듯이 권력/지식을 반영한 사회적 실천의 창구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행위자가 구조적 맥락에 맞추어 구성하는 관념이자 개념이며 담론이다. 따라서 이렇게 코젤레크, 스키너, 푸코 등의 접근을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이해하는 정보화의 개념은 일종의 개념-관념-담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합체를 개념과 관념 및 담론(통칭해서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the concept about concepts)’이라는 의미에서 ‘메타개념(meta-concept)’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보화의 개념사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대를 펼쳐나가는 메타개념의 언어적·사회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현재-미래의 입체적인 구도를 조망하면서도, 정보화의 개념사는 그 특성상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개념사를 지향해야 한다. 사실 개념사는 원래 시간 축을 달리해서 사회사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진화적 맥락에서 개념을 보자는 연구방법론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념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사의 방법이다. 개념사는 개념의 기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화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의 전개과정을 추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념사에는 원래의 ‘미래의 시각’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코젤레크가 미래 기대지평과 과거 경험지평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창발하고 있는 정보화는, 코젤레크가 강조하는 과거의 경험과 기대의 지평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이, 담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시각을 원용하면 정보화를 통해서 구성되는 미래의 지평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본격적인 개념사의 연구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간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면, 이러한 [미래]개념사를 투영하는 공간 개념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개념사 연구에서 공간 축을 다르게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독일 개념사의 문제의식 안에 단순한 개념의 생성과 변화사가 아닌 외래 개념의 전파사라는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코젤레크의 개념사를 조명하는 작업

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은 구미의 주류 역사학계나 사상학계가 아닌, 핀란드와 같은 유럽의 주변부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등지에서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특히 개념사 또는 개념전파사는 그 바탕에 서구중심주의의 사회과학적 풍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깔고 있다. 실제로 공간 축을 이동하여 보는 [미래]개념사는 개념이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탐구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동시대의 유사한 개념이라도 장소에 따라서는 상이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미래]개념사 연구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을, 그리고 장소의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문명권의 입장에 입각해야 한다”(김용구 2008, 8).

이러한 공간 축 이동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한국에 닥쳐오는 미래의 변환을 잡아내는 개념사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적 맥락에서 본 서구 근대 개념의 변환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서구 개념에 대한 이해에 더불어, 일차적으로는 동아시아 전통 개념과 비교하는 시각이 필요하다(하영선 홈페이지 2009; 하영선·손열 편 2012). 또한 전파된 서구 개념의 수용사와 이에 대한 번역의 개념사가 필요하며, 그 개념을 성장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개념전파사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영선(2014)은 “한국 개념사 연구는 19세기 개념도입사에서 21세기 4중 개념 복합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술했던, “19세기 동아시아가 새롭게 겪어야 했던 근대적 문명표준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서양 개념을 도입했다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이 겪고 있는 복합적 문명표준은 고금동서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중개념 복합사의 핵심내용은 전통개념 영향사, 근대개념도입사, 냉전개념형성사, 미래개념전파사로 요약될 수 있다(하영선 외 2014).

결과적으로 시공간을 복합해서 보는 미래개념사는 개념의 생성-전파-수용-번역-반역-역전파-중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 나타난(또는 나타날) 정보화 개념의 언어적 실천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개념-관념-담론 복합체가 경합하는 와중에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된 ‘메타개념’의 표준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서로 경합하는 외래의 정보화 담론을 수용 및 전개하는 것이었으며, 미래에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념의 번역과 반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개념 수용 과정에서 위와 아래로부터의 국내 정치사회세력들

이 경합 가운데 진행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개념의 역전파와 중개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그 성과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발산하는 기대와 함께, 글로벌 정보화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III. 정보화의 개념적 분석틀

정보화(情報化)라는 말은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보면, 전후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슬로건 차원에서 정보화라는 용어가 고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라는 말에서 파생한 ‘정보+화(情報+化, informati-zation)’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당시 일본의 관점에서 본 미래개념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번역어인 *informatization*은 비영어권에서 고안된 말이기 때문에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영어권의 연구자들은 정보화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학술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슬로건이나 저널리즘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서 엄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정보화의 개념은 대략 1970년대 이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층적인 사회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발간한 『온라인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생산과 처리, 축적, 유통, 공급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에 전자 정보 기기가 도입되어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생산 기술이나 **경영 전략**에 정보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된 상태(강조는 필자가 추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용례들을 보면 한국에서 이해한 정보화라는 말은 좁은 의미 또는 넓은 의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일상적인 또는 학술적인 용례로 볼 때 정보화는 그 외연과 내포를 설정하기 어려운 메타개념, 즉 개념-담론-관념 복합체이다. 머리말에서 적은 바와 같이, 정

보화 개념의 외연과 내포는 애매모호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보화가 메타개념이라는 사실은 개념으로서 지위를 얻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역사상 존재했던 개념들은 그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경험의 맥락들을 동시에 품는 것은 개념으로의 필요조건이기도 했다. 마치 정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국가’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통치, 영토, 시민, 입법, 사법, 행정, 조세, 군대 등과 같은 인접 사회과학 개념들이 유입되어 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은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각자 고유한 전문술어와 용어들로 지칭되는 모든 다양한 사실(실상)들이 ‘국가’라는 단어로 파악되면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나인호 2011, 53).

마찬가지로 정보화 개념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맥락이 유입되어 있는 메타개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용어나 개념은, 보통 ‘정보(情報, information)’를 한 축으로 하고, ‘-화(化, -zation)’를 다른 한축으로 하는 두 가지 그룹의 단어들이 조합되는 ‘언어적 구성’의 합성어로 출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보경제, 디지털경제, 창조경제, IT산업, 정보사회, 지식사회,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네트워크 사회 등의 용어가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구성의 과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개념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담론적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분석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즉 한국에서 나타난 정보화의 개념은 아래의 세 가지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조합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각 범주의 각 층위에서 나타나는 정보화 개념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언어적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했다.

첫째, 정보화의 개념은 보통 기술적 차원에서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보는데, 그 층위는 i)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기기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층위; ii) 정보, 특히 소프트웨어나 기술표준 등으로 구성되는 논리적 층위; iii) 지식, 이념, 정체성,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는 콘텐츠 층위 등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개념적 층위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언어적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리적 층위를 강조하는 정보화냐, 논리적 층위를 강조하는 정보화냐, 아니면 콘텐츠 층위를 강조하는 정보화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물

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산망 사업이나 전자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사고 했느냐,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정보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과 경제의 맥락에서 정보화에 접근했느냐,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그 활용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관심사를 우선시했느냐 등의 문제를 놓고 정보화의 개념을 달리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층위의 정보화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각에서 물리적 인프라로서 네트워크 또는 통신방송 네트워크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무선 복합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둘째,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node)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정부 주도 정보화, 기업 주도 정보화, 시민사회 주도 정보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해서 볼 때, 정보화는 주체에 따라서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담론을 강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장에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정부(government), 정권(regime), 네이션(nation) 중에서 어떤 관점이나가 문제시되는데, 이에 따라 전자정부, 감시정권, 지식국가, 발전국가, 규제국가, 참여국가 등의 담론이 경합한다. 또한 기업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기술경제와 정보산업의 비전과 산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냐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사회의 시각에서도 효율성의 기술경제 비전을 넘어서는 형평성의 지식사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정보화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언어적 실천의 과정인데, 정보화 정책의 기초를 둘러싼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정보화와 관련된 규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경쟁도 나타난다.

끝으로,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화의 목표와 결과라는 차원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 즉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정보화가 상정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단(單) 허브(mono-hub)형 네트워크, 다(多) 허브(multi-hub)형 네트워크, 탈(脫) 허브(hub-bypass)형 네트워크 등으로 대별해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여 중심성(centrality)을

제공하는 주체(예를 들어 서버)의 존재 여부인데, 이는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외래 정보화 담론의 기원을 이루는 미국과 일본의 담론이 경합하는 부분이기도 했으며, 향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의 정보화 담론을 구별해서 보는 감상 포인트이기도 하다. 또한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집중과 탈집중 및 복합의 세 가지 메커니즘이 상정될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일방향 네트워크로서의 웹1.0과 쌍방향 네트워크로서의 웹2.0, 그리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복합 네트워크로서의 웹1.5 등을 나누어 보는 기준이 된다. 이는 지배냐 참여냐, 아니면 중개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한편 정보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특히 인터넷)에서 물리적 링크 자체의 존재 여부였는데, 이에 따라서 유선 인터넷 모델, 무선 인터넷 모델, 유무선 복합 모델 등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보화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다.

요컨대, 이렇게 정보화 관련 용어와 개념들의 구성 과정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본 한국 정보화의 사회사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와 관련된 개념의 선택과 조합의 과정에 언어적 실천으로서 정보화의 개념이 담겨있다는 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공간을 복합한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볼 때, 정보화 개념의 생성-전파-수용-번역-반역-역전파-중개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관념-담론 복합체(즉 메타개념)의 경합은 그야말로 실제의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언어적 실천’의 ‘표준경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정보화 개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론의 작업을 펼쳐보도록 하겠다.

IV. 미래개념사로 보는 한국의 정보화

1. 전파와 수용: 미·일 정보화 담론 사이에서

정보화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초창기 한국의 정보화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제시하는 미래 네트워크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쪽의 개념을 청사진으로 삼아서 정보화 시대의 미래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까? 물론 미국과 일

본의 정보화 담론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양국이 정보화의 선도 부문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허브가 되어 만드는 네트워크 중에서 어느 쪽에 연결하려 했느냐의 문제는 한국에서 추진된 정보화의 개념적 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도는 유무선 인터넷 담론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전파와 수용을 놓고서 벌어졌으며, 향후 사물인터넷 담론의 전파와 수용과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유무선 인터넷 담론의 전파와 수용이다. 초창기 인터넷 담론의 생성과 전파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담론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대별해서 보면 미국의 인터넷 담론은 정보화 시대 초창기의 유선(wired) 인터넷 담론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구축의 유선 담론을 생성하고 전파해 왔으며, 그 후 이러한 유선 인터넷 모델 위에 무선(wireless) 인터넷 모델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다양한 국내적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 초창기 유선 인터넷의 보급이 원활치 못했다. 게다가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일본 정보통신 기업들의 전략과 관성으로 인해서 유선 인터넷보다는 무선 인터넷을 강조하는 담론과 서비스가 발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에서 인터넷의 보급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점은, 유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 모델이나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한 일본 모델에 비교할 때, 한국 인터넷 모델이 양자를 모두 담아내는 일종의 복합 모델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80-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의 인터넷 보급 모델은 유선 모델과 무선 모델이 모두 강점을 보이는 독특한 ‘유무선 퓨전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비쿼터스 담론의 전파와 수용이다. 초창기 유무선 인터넷에서 나타났던 한국 정보화의 특징은 2000년대에 이르러 이른바 유비쿼터스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로 요약되는 미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모델’과 디지털 정보가전의 홈 네트워킹으로 요약되는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모델’이 복합적으로 전파 및 수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의 유무선 인터넷 담론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유비쿼터스 담론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방식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 양국 기업들의 이익이 강하게 담겨있음은 물론이었다. 전자가 도처에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서 이동하는 곳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형 ‘유선 인터넷 담론’의 원형을 이

문다면, 후자는 모바일 단말기에 컴퓨터 칩을 내장시켜 어디에서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컴퓨터 칩이 내장된 정보가전 제품들을 제어하는 일본형 ‘무선 인터넷 담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유무선 인터넷의 복합적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도 한국의 정보화는 이러한 두 가지 경합하는 유비쿼터스의 담론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특징을 보였다(김상배, 2004).

끝으로, 사물인터넷 담론의 전파와 수용이다. 사물인터넷도 앞서 언급한 유무선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담론에 맥이 닿는다. 현재 사물인터넷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술과 서비스를 표준으로 세우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가별 담론의 차이도 발견된다. 물론 아직은 명확한 대립의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중심이 되어 생성하는 사물인터넷 담론이 중앙 서버가 존재하며 하나의 장치로 다른 여러 장치를 동시에 통제하거나 동기화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담론이라면, 독일이나 일본, 중국이 강조하는 담론은 이른바 M2M(Machine To Machine) 기반 인터랙션 데이터 저장의 사물인터넷 담론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담론이 외부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중앙제어적인 단 허브형 네트워크 모델이라면, 독일이나 일본, 중국의 경우는 근접센서를 탑재한 기기들이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하는 다 허브형 네트워크 모델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경쟁의 양상은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어느 쪽의 담론에 친화적인 사물인터넷 또는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하원규·최남희 2015; 황원식 2015).

2. 번역과 반역: 발전—규제—참여 담론의 경합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전파된 정보화 개념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번역’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비교 정보화 전략의 시각에서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논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의 번역 과정에는 19세기 이래 근대화나 1960~70년대 이래 산업화에서부터 비롯되는 ‘전통개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보화 번역의 과정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르러 부분적인 변환을 겪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효율성 중심의 정보화 추진에 대응

하여 형평성과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화 담론이 부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정보화 정책의 기초 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번역(翻譯)’이라는 의미에서 ‘반역(反譯)’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초창기부터 정부가 주도한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특히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화기본계획 등의 존재는 과거 경제개발기의 발전국가의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이러한 모델이 초창기 한국의 정보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만, 사회의 질적 발전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에 편향된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진전과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보통신부 주도의 모델은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화 관련 부처들의 통폐합은 정보화 담론의 변화를 엿보게 하는 사례이다. 새로이 출현하는 미디어 융합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규제국가 담론이 기존의 발전국가 담론을 대체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출현한 정보화 전담부처 부활의 요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되어 정보화 정책기능의 재분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행보는 기존의 산업화 담론이 정보화 담론을 덮어쓰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 부문에서 전개된 정보화 담론은 민간 부문의 기업모델에도 투영되었다. IT분야의 현장에서 뛰었던 한국 기업의 조직 모델이나 IT분야의 산업조직 모델을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속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보화와 IT산업의 성공을 이끈 기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벤처형 중소기업들이 아니다. 삼성, LG, SK, KT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기존의 대기업이거나 그 자회사들이다. 한국의 IT 발전 전략은 그 속성상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가능하였고, 역으로 한국의 IT산업 발전은 대기업의 자본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수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업모델들이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끝내 죽지 않고 적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델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직관성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업모델들은 IT분야의 하드웨어 산업이나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 그 효과를 발휘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 정보화의 번역의 역사에서 주목할 것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항담론의 출현이다. 이러한 대항담론을 기성권력이 주도하는 정보화 담론의 ‘번역’과는 궤를 달리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보화 담론의 ‘번역(反譯)’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담론의 등장은 국내적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정보화 담론과 아래로부터의 정보화 담론이 경합하는 맥락, 또는 기술효율성 담론과 사회형평성 담론의 경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모델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포털과 각종 문화동호회, 연예인과 정치인 팬클럽 등의 형태로 활동하던 네티즌들이 붉은 악마나 노사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서 사이버 액티비즘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원모델에서 참여모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정치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치사회에서 많은 사례들이 부상하였지만 정보화 담론의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반대 문제와 연관되어 벌어졌던 2008년 촛불집회의 사례였다.

3. 역전파와 중개: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발산?

정보화 개념의 수용과 번역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정보화가 대외적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보화 분야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거둔 한국이 개념적 차원에서 정보화를 역전파할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수출될 한국형 정보화 모델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보화의 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정보화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도국에서 중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의 증대를 배경으로 해서 생성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한국이 이룩한 정보화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발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견국 외교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외교 전반의 문제의식과도 통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이 추구하는 정보화 모델이 새로이 창발(emergence)할 미래질서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이 대외적으로 역전파할 정보화 모델은 대기업 모델과 발전국가 모델의 조합

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형 발전모델이 산업화 시대의 성공과 좌절을 겪고 나서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나름대로의 적응하는 모델로 그려질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정보화에 이른바 ‘서울 컨센서스’의 요소들이 얼마나 발견되느냐의 문제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발전국가 담론에서 시작해서 규제국가 담론을 거쳐 정치 참여 담론의 ‘번역’을 경험한 한국의 정보화 모델을 극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서울 컨센서스는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계열적 경로를 보여주는 동태적 모델인 동시에, 양자를 모두 엮어내는 일종의 ‘메타 모델(meta-model)’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정보화 분야의 한국이 벌이고 있는 IT분야의 국제협력 사업들은 정보화 분야에서 서울 컨센서스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사업과 관련된 IT분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형태의 IT분야 개도국 지원,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의 전수,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자정부 자문사업과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 그리고 한국형 표준화 모델의 전파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보화 외교의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담당할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제시할 글로벌 정보화 리더십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의 정보화 외교는 기존의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또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경합하는 질서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수출하는 맥락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해 가는 글로벌 IT환경에서 새로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외래 정보화 담론을 수용 또는 번역하는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 한국이 생각하는 미래 네트워크 담론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정보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게 유리한 정보화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운영방식은 무엇인가? 한국이 그러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운영방식을 스스로 고안할 수 없다면 누가 만드는 어떠한 네트워크로 편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정보화를 ‘번역’해야 하는가?

과거 한국이 추진했던 정보화는 미국이 짜놓은 네트워크의 판에 일본의 네트워크 담론이 도전하는 맥락에서 ‘자리잡기’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리잡기’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떠한 정보화 담론을 생성 또는 수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보다도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21세기 미래권력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라는 것이 존재할 것인가? 어쩌면 미래 정보화 담론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언어적 실천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 담론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구할 미래 정보화 개념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먼저 매력적인 개념을 개발해서 전파하는 것은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V. 맺음말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한국의 정보화 개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시론의 작업을 펼쳤다. 이렇게 정보화의 개념사를 살펴보는 작업은 정보화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가오는 미래 정보화를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척하려는 언어적 실천의 동학을 탐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이 코젤레크가 주도한 독일 개념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미래개념사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이 파악한 한국의 정보화는 이른바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모색하는 언어적 실천의 양식들이 서로 경합하는, 국내외 차원의 표준경쟁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평 속에서 벌어진 정보화 개념의 표준경쟁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화 개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미국의 정보화 담론과 일본의 정보화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수용 및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형성되었는데, 1990년대 인터넷의 도입과 확산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선 인터넷 담론과 일본이 주력한 무선 인터넷 담론이 경합하는 구도가 펼쳐졌으며, 2000년대에는 모든 곳에 컴퓨터를 내재시키는 미국형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한편으로 하고, 정보가전 기기들이 서로 통신하며 네트워크하는 일

본형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담론이 다른 한편을 차지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의 정보화는 미국과 일본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번역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정보화 개념의 번역과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위로부터의 정보화 담론과 아래로부터의 정보화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기술효율성을 앞세우는 정부-기업 담론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시민참여 담론이 양대 축을 이루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주도의 정보화 담론은 그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번역 과정에서 산업화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발전국가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보화 분야 대기업들을 지원하면서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사회 전면으로 나선 네티즌들의 참여와 소셜 네트워크의 힘은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번역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정보화 개념의 역전과와 중개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한국이 이룩한 정보화의 성과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기대와 함께, 중견국 외교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개하는 모델의 발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화는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화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모델이 대외적 차원에서 정보화 강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다소 모순적 요소로 작용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정보화 거버넌스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국 정보화 외교의 난맥상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향후 한국이 미래 정보화 담론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두 차원 모두에서 서로 호환되는 정보화 담론을 번역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한국형 정보화 모델의 내용은 크게 외래 정보화 개념의 복합적 수용, 정부의 발전국가로서의 역할, 대기업 주도 산업조직 모델, 디지털 정치참여의 활성화, 중견국 정보화 외교의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난 수년여 년 동안 제기되었던 정보화 개념들이 단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보화의 각 행위주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실을 창출하고자 경합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내보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특정한 개념-관념-담론의 복합체가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외래 정보화 담론을 수용하고 번

역 및 반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이 주도한 효율성 위주의 번역에 대항하는 반역의 목소리가 출현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는 미래개념사의 시각에서 본 언어적 실천의 경합과정으로 그려진다.

개념사의 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 미래 정보화의 개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국 정보화의 길이 모색되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이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나 사물인터넷 산업의 기세로 미루어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네트워킹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변환의 전망 속에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과도 배타적이지 않은 관계를 설정하는, 다시 말해 호환성을 지닌 미래 정보화 개념을 생산해 내는 일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호환되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적 차원에서도 정부-기업-사회의 세 주체가 상호 포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도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설득하고, 한국의 성과에 주목하는 개도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매력적인 상상력의 발휘도 필요하다.

요컨대, 미래개념사의 연구방법을 원용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면 정보화라는 개념의 생성과 전파 및 수용은 단순히 중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내외 행위자들의 이익과 권력이 개입하는 정치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19세기 근대화와 20세기 산업화의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권력변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역사 속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개념사가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들의 전통권력 계급을 반영했다면, 21세기 정보화 개념의 전파와 수용, 번역과 반역, 그리고 역전파와 중개가 발생하는 현상은 신흥권력(emerging power)을 둘러싼 새로운 행위자들의 각축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보화는 과거의 경험지평 속에서 미래의 기대지평을 열어가는 언어적 실천의 첨단에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강조컨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미래개념사의 차원에서 정보화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정보화 개념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6년 5월 5일

심사일: 2016년 5월 20일

참고문헌

- 김상배. 2002.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 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143-163. 세종연구소.
- _____. 2004.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권 3호, 101-123.
- _____. 2010. “지식·문화 분야에서 IT모델의 확산.”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409-440.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근대한국의 기술개념.” 하영선·손열 편. 『근대한국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307-341. 창작과 비평사..
- 김용구. 2008. 『만국공법』. 소화.
- 김인성. 2011. 『한국 IT산업의 멸망』. 북하우스.
- 김평호. 2006. “뉴미디어-정보화 정책과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한국언론정보학보』 36권, 231-254.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박근갑·Hölscher, Lucian·Reichardt, Rolf·Richter, Melvin·김학이·고지현·고원·나인호·이경구·김성호·최용찬·황정아. 2015.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개정증보판. 서울: 소화.
- 송희준. 2009. “국가정보화정책의 성찰과 전망.” 『The e-Bridge』 7월호, 82-111.
- 송희준·조택. 2007. “한국의 전자정부.” 『정보화정책』 14권 4호, 20-37.
- 유석진·강원택·김면희·한영빈·이유진·김용복·임혜란·정연정·유석진. 2006. 『정보화와 국가전략: 아시아와 서구의 비교 연구』. 푸른길.
- 유선영·박용규·신현준·이상길·강명구·백미숙·윤상길·임종수·한국언론재단. 2007.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 이광석. 2012. “디지털 정보 문화사 25년의 궤적과 미래: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 『Local Informatization Magazine』 74권 5-6월호, 64-67.
- 이혜원·명승환. 2013.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0권 4호, 3-2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 2005.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법영사,

- 정충식. 2009.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권 4호, 39-66.
- 하영선·최정은·신윝희·김영호·장인성·강동국·김용직·손열·김석근·이현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하영선. 2004. “변화하는 세계와 개념사.” 『세계정치』, 25권 2호, 3-13
- 하영선 홈페이지. 2014. “전파모임 세미나 기록.” http://www.hayoungsun.net/panelView.asp?code=ys_meet2&idx=509&id=meet2&page=1(검색일: 2016년 2월 28일).
- 하영선·손열 편. 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 하원규·최남희. 2015. 『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즈하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1993-2014.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성욱. 편.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 홍성태. 2005. 『지식사회 비판』. 문화과학사.
- 황원식. 2015.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동향과 시사점.” 『산업분석』 11월호, 14-23.
- 황종성. 2007. “한국식 정보화 모델의 탐색,” 『정보화정책』 14권 4호, 4-19.
- Bell, Duncan S. 2011. “The Cambridge School and World Politics: Critical Theory, History and Conceptual Change.” *Working Paper*. First Press.
-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Keller, Reiner. 2011. “The Sociology of Knowledge Approach to Discourse(SKAD).” *Hum Stud* 34, 43-65.
- Kim, Pyungho. 2006. “Is Korea a Strong Internet Nation?” *The Information Society* 22, 41-44.
- Koselleck, Reinhart. 1985.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MA: MIT Press.
- Koselleck, Reinhart. 1998. “Social History and Begriffsgeschichte.” In Iain Hampsher-Monk, Karin Tilman, and Frank van Vree. eds. *History of Concepts: Comparative Perspective*. 23-35.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The Practice of Conceptual History: Timing History, Spacing Concep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ushida, Kenji and Seung-Youn Oh. 2007. “The Political Economies of Broadband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Asian Survey* 47(3), 481-504.

- Lee, Heejin, Robert M. O'Keefe, and Kyounglim Yun. 2003. "The Growth of Broadband and Electronic Commerce in South Korea: Contributing Factors." *The Information Society* 19, 81-93
- Müller, Jan-Werner. 2011.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as Contemporary Histo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46. No. 3, 574-590.
- Shin, Dong-Hee. 2007. "A Critique of Korean National Information Strategy: Case of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4, 624-645
- Skinner, Quentin. 1969.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History and Theory* 8, 3-53.

ABSTRACT

A Future-Conceptual History of Informatization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fro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Sangbae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hat examin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cept of informatization in Sou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This conceptual historical study of informatization does not mean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informatization for the last years, but also implies a kind of discursive practices that intends to lead the future direction of informatization toward South Korea's interests. The praxeological purpose lies behind the new methodological attempt of the "Future-Conceptual History," spined-off from the Conceptual History (Begriffsgeschichte) by a German historian, Reinhart Kosellec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Conceptual History, this paper understands South Korea's informatization a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onceptual standards of informatization at the three levels, which consequently generated the so-called "South Korean Model of Informatization." First, at the level of diffusion and adoption, South Korea's informatization had deployed on the ground between the two network discourse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at the level of "translation" and "treason" (or "reverse translation"), South Korea had not only driven its project of informatization with the discourses of developmental state, adopted by government and big business, but also relied on the civil society's discourses emphasizing participation and democracy. Finally, at the level of "reverse diffusion" and "conceptual brokerage," South Korea as an emerging middle power is recently making diplomatic efforts to propagate its successful model of

informatization toward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South East Asia.

Keywords: Informatization, South Korea, Conceptual History, Future-Conceptual History, International Politics